

화물연대, '안전운임 연장' 법안 비판

당정 일몰제 연장안에 "화주 처벌조항 삭제한 악법" "정부가 합의 어겨 분노...野 법안 통과때까지 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본부 노동자들이 예고대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당정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법안에 대해 "화주 책임을 삭제한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더 후퇴하는 악법을 들이밀었다"며 "정부가 6월 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 선택하자는 분노로 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8일간 파업으

로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오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가 운임으로 화물 노동자가 과로·과속·과적으로 내몰리고 사고로 이어지자 이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로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총파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총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일몰제 시한 연장이 아닌 폐지를 골자로 한다. 또 현재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5개 품목과 그 외 품목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일몰제 연장 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 무력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될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화물운송료는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주는 '안전운송운임'과 사업자가 화물노동자에게 주는 '안전위탁운임'으로 구성돼 있다. 화주와 운수사업자 사이 안전운송운임부터 적정한 수준이 보장돼야 노동자들도 운송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김정재 의원 안은 안전운송운임 조항을 삭제했다"며 "안전운송운임이 없으면 운수사업자가 화물노동자한테 쥐여 주는 운임만 강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운임이 100만원이면 화주와 사업자가 50만원으로 계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화주와 사업자 간 권력관계로 인해서 위탁운임보다 낮은 수준의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노동자는 위탁운임을 보장받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안전운송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삭제된 것도 문제삼았다. 현재는 위반시 1차로 국토부 장관이 개선명령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김 의원 안에는 개선명령 자체를 없애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어졌다고 화물연대는 주장한다.

박 실장은 "화물 노동자의 진짜 사장, 실제 노동조건과 운임을 결정하는 것은 화주"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3년 간 한 건도 화주를 처벌한 적은 없다"며 "선언적 책임마저도 거부할 건가"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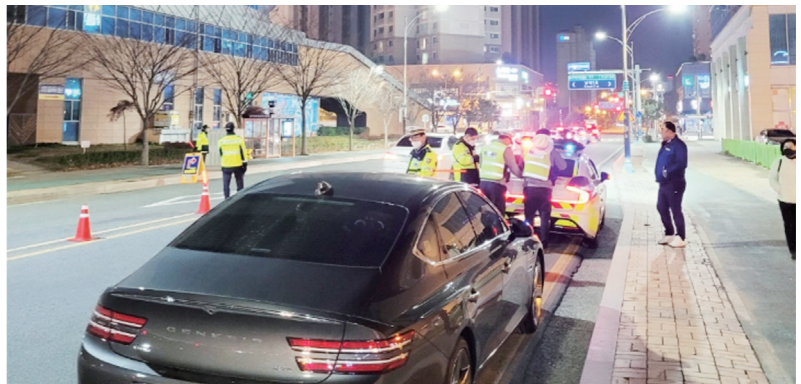
김재한기자



광양경찰,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강화

광양경찰서(서장 정재봉)는 지난 17일 중마동 미관광장, 광양읍 칠성리 주변 일대에서 수험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민·警·學 합동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펼쳤다.

광양=김현근기자



무안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강화

무안경찰서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한 음주운전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강화한다.

무안=이기성기자



여수소방, 이동안전체험차량 활용 소방안전교육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최근 여천어린이집 등 4개소를 방문하여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운영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 '2022 사랑의 김치나눔 한마당'이 열린 22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2개 기업·기관·단체 구성원과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소외계층에 전달할 김치를 담고 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 1만6000포기는 취약계층 48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불법 증차로 보조금 가로챈 화물차협회장 등 2명 송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불구속 송치

화물차를 불법 증차해 수 십억원대 정부 보조금 등을 가로챈 운수업자 등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증차가 허용된 특수용 화물차 번호판을 일반 화물차에 바꿔 달아 유가보조금 등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지역 화물차 운송협회장 A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특수화물차의 대·폐차(노후차량 교체) 과정에서 번호판을 바꿔 부착하는 수법으로 일반화물차를 불법 증차해 각종 보조금 2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행법에서 증차(번호판 신규 등록)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 일반화물차가 시세·지입료 등이

값싸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1월 개정된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화물차는 번호판 신규 등록을 하려면 허가를 얻어야 한다.

화물차가 과잉 공급될 경우 벗어날 경쟁 과열, 운임 급락 등 폐단을 막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증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다만 정소차·살수차·현금수송차·노면정소차 등 등 수요가 인정되는 특수화물차는 제한 증차가 가능하다.

특히 A씨 등은 화물차운송협회가 지자체 대신 특수화물차 대·폐차 심사 업무를 대행하는 점을 악용, 빼돌린 특수화물차 번호판을 일반화물차에 바꿔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 이후 차량 등록 과정에서 도

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 전문성 부족, 미흡한 인신인계 등으로 인해 불법 증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불법으로 늘린 일반화물차 61대를 모아 설립한 운수회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통째로 매각했다. 매각 이후에도 경영에 관여해 특수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등을 빼돌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차 제한 차량 구분과 관련 규정이 자주 바뀌어 지자체 공무원들이 불법 증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담당자가 번호판 조희만 해봤다면 미리 불법 증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며 "대·폐차 심사 업무를 운송협회에 맡겨 놓은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이다"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의붓딸 성폭력 학대 비정한 계부 징역 7년 선고

7년간 수차례 의붓딸을 성폭력·학대한 4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출소 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거지 안방과 주방 등지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B씨에게 다가 성폭력을 행사했거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0세부터 17세까지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든 상황을 이용해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학대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이후 환자·환정 증세에 시달렸고 만성적인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완도해경, 신임 해양경찰 20명, 최일선 현장 첫걸음 내딛어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지난 21일, 기본 교육과정과 현장 실습을 마친 20명의 신임 해양경찰관들이 임용식을 가지고 최일선 현장으로 당당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주지방보훈청-LG이노텍 노동조합 광주지부, 주택 개보수 지원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정홍식)은 21일 LG이노텍 노동조합 광주지부(지부장 이규채)와 함께 '보훈가족 행복하우스 59-61호' 주택 개보수 가구를 방문하여 기념명판을 전달하고 위로 격려하였다.

최이슬기자



국립공원공단-중흥그룹, 지속가능한 자연생태 보전 위해 협력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홍근)과 중흥건설(주)(대표이사 백승권), (주)대우건설(대표이사 백정원)은 최근 국립공원 내 지속가능한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ESG경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재한기자